

지역 먹을거리 활성화는 녹색성장의 밑거름

지역 먹을거리 활성화를 위한 “로컬 푸드 운동”이 주목받고 있다. 일정한 지리적 거리 안에서 먹을거리를 생산, 가공, 소비하게 되면 자원고갈이나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한 먹을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게 되면 지역 내 자원순환체계가 형성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와 이해가 증진될 수 있다.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것은 출처를 알지 못하는 먹을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먹을거리 위기는 전통적인 농사가 산업인 농업으로 전환되면서 생긴 일이다. 산업화된 먹을거리 생산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었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경제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면서 소비자 보호는 어렵게 됐다.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먹을거리 대량생산방식은 집약적 영농, 유전자 조작, 화학비료와 동물사료 사용 확대를 가져왔고,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양산, 에너지와 자원낭용 및 환경훼손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단절은 먹을거리의 장거리 운송을 초래하여 에너지 소비, 탄소배출 및 환경훼손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대량의 균일화된 식품을 양산하여 지역고유의 전통적 식(食)문화를 붕괴시키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가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자생적 영농기반과 식량의 자급역량을 크게 약화시켰고, 이제는 농가의 생존기반마저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농산물 교역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먹을거리 위기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더 이상 먹을거리 위기를 방치하기 어렵게 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식품위기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까?

첫째, 먹을거리 위기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확대와 참여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 먹을거리 활성화는 지역사회 단위의 소규모 생산·소비자 집단의 실천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

다. 자연영농, 유기영농을 실천할 농가, 영농조합 및 마을단위 생산자 집단의 참여와 안전한 먹을거리를 소비할 지역사회 내 각 급 학교, 연수기관, 숙박음식업체, 식품가공업체 및 주부 등 소비자 집단의 참여를 동시에 이끌어 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략과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먹을거리 활성화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교류와 신뢰 확대에 치중해야 한다. 지역 먹을거리 활성화가 단순히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데 치중해서는 안 된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비자는 안전하지 못한 식품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생의 거래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일부 선진사례에서는 소규모 친환경 농가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 직판, 전통식품 가공 및 농가식당 운영을 적극 활성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증대와 신뢰강화에 기여토록 하고 있어 우리에게도 좋은 시사점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지역 먹을거리 활성화를 위한 지역지원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지역의 지원조직 설립,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먹을거리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의미다. 즉, 지역사회 단위에서는 새로운 영농 및 먹을거리 생산방식을 도입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먹을거리의 새로운 생산-공급-소비 시스템 구축에 따른 다양한 정보, 기술, 금융, 마케팅 등 광범한 지원서비스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역 먹을거리 활성화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는데만 한정되지 않는다. "로컬 푸드 운동"은 전통적 생활문화를 보전하고, 자원순환체계를 형성하여 생태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삶의 실천운동이다. 지역 먹을거리 활성화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기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외 투자유치와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충남이 지역 먹을거리 활성화에도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한다.

[충청투데이 9월 4일자 20면]